

구미지역경제

ISSUE FOCUS

Vol. 38 (2020. 04.)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1
02 국내외 경제이슈	6
03 국내외 정책이슈	18

[FOCUS]

01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31
------------------------------	----

작성 : 오현주 선임연구원
(hjoh@geri.re.kr)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 개발 우주 관측기기, 천문학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수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최근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Istituto Nazionale Di Astrofisica)와 계약을 체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채널 동시 관측 우주전파 수신시스템인 초소형 3채널 수신기를 이탈리아 국립 전파망원경 3기에 공급(총 280만 유로, 약 37억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4채널(22, 43, 86, 129GHz) 동시 관측 수신시스템을 1/10 크기(면적 기준)로 줄여 개발한 것으로,
 -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에 설치된 4채널 수신시스템이 밀리미터파*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부문에서 획기적인 성능향상을 입증하자,
 - * 43, 86, 129GHz와 같은 초고주파 영역으로, 한 파장의 길이가 밀리미터(mm) 단위이기 때문에 밀리미터파라고 표현하기도 함
 - ** 수백~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여러 대의 전파망원경을 동시 운용함으로써 전파망원경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구경을 가진 거대한 가상의 망원경을 구현하는 방법
 - 이를 도입하려는 국제적 요청에 따라 KVN에 적합하게 설계된 4채널 수신시스템을 다른 전파망원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초소형 광대역 3채널(18~26, 35~50, 85~116GHz) 수신기로 개발한 것
-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가 요구한 이탈리아 전파망원경 3기의 성능 개선 및 초소형 3채널 수신기 도입을 위한 공개 입찰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2일 천문연에 낙찰하고 최근 계약을 완료
 - 천문연은 해당 수신시스템을 사양에 맞게 제작 후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22개월 이내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된 수신시스템은 각 전파망원경에 설치·운용될 예정
- 4채널 수신시스템은 '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창의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18년 과학기술연구회 우수연구성과에 선정된 바 있으며,
 - 4채널 수신시스템이 설치된 KVN은 지난해 4월 사상 최초 블랙홀 관측 당시 EHT(Event Horizon Telescope, 사건지평선망원경)와 동시에 관측을 진행, 해당 관측 결과는 EHT 블랙홀 이미지의 밝기를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
- 천문연 한석태 책임연구원은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유럽 VLBI 관측망의 핵심 시설을 보유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태국,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도입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 이 시스템이 각국 전파망원경에 설치되어 KVN과 함께 활용된다면 고감도, 고분해능으로 블랙홀 및 우주 초미세 구조의 별과 은하에 대한 관측연구가 가능해진다고 밝힘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도레이첨단소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대량 생산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레이첨단소재(주)가 3월 31일부터 하루 13톤의 필터용 멜트블로운(MB) 부직포(업체 추산 마스크 650만장 생산분량)를 본격 생산,
 -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용 멜트블로운 부직포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도레이첨단소재는 그동안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존 기저귀용 소재 생산라인을 개조, KF-80급 마스크용 필터 생산라인으로 전환
 - 신규 생산라인은 당초 5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3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현장방문과 산업부 협의* 등을 통해 한달 반 이상 앞당겨 양산체제를 갖추게 됨
 - * 노즐 등 기술애로, 수요처(마스크업체) 매칭 관련 협의 등
- 도레이첨단소재의 마스크용 소재는 3월 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안전성 검사를 마쳤고, 식약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3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본격 투입될 예정
 -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와 협력해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할 계획
-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외피와 내피에 쓰이는 스펀본드 부직포와 필터 역할을 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따로 생산해 접합하나,
 - 이번 도레이첨단소재의 생산 설비는 한 라인에서 스펀본드와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함께 생산하는 혁신공정으로, 멜트블로운 부직포만 생산하는 설비에 비해 생산속도가 5배나 빨라 생산량이 5배로 늘어나는 획기적인 기술

< 기존 마스크와 도레이 신규 멜트블로운 마스크 비교 >

기존	신규	비고
외피 (스펀본드, S) (정전 MB) 내피 (스펀본드, S)	외피 (S + 정전 MB + S) 내피 (S + 정전 MB + S)	기존 정전(charging) MB가 외피와 내피內로 복합화

- 이러한 신공정을 통해 도레이첨단소재는 마스크용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하루 13톤 생산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룸
 - 지난 1990년부터 스펀본드 부직포 사업을 시작한 도레이첨단소재는 마스크, 의료용(방호복), 기저귀용 위생재, 산업용 부직포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아시아 1위 종합 부직포 생산 기업
 - 그동안 축적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균일도와 차단성이 높은 고기능성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부직포 등 차별화된 신제품을 적극 생산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 국제표준안(DIS)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힘
- 이 표준안은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회원국 전체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
- 이번에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된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 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 검사에 적용 가능
- 이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 국표원과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스마트링 스타트업, Oura

- 핀란드의 Oura社は 2015년 수면 및 활동 트래킹이 가능한 스마트링을 개발해 Kickstarter를 통해 펀딩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3월 Forerunner Ventures, Square 등의 투자자로부터 2,800만 달러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
- 현재 Oura Ring은 기존 단말보다 소형에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했으며, 레드 적외선 LED 센서, NTC 온도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등을 내장해 심박수, 심박 변이도, 체온, 도파 수 등을 포함한 수면 및 활동량 트래킹이 가능
- 티타늄으로 제작한 Oura Ring은 1회 충전에 7일간 사용 가능하고 방수기능도 지원
- 한편, 스마트링은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트랙커보다 수면 착용 시 편안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트니스 트랙커 기능 대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가정용 질환 진단키트 업체, EverlyWell

-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가정용 질환 진단키트 업체인 EverlyWell이 코로나19 샘플 채취 키트를 출시할 예정
- 이번에 출시하는 코로나19 샘플 채취 키트는 면봉으로 된 채취 샘플을 안전하게 재배송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
- 이용자는 안내에 따라 샘플을 채취한 후 배송 물품에 담아 EverlyWell 측에 보내고, EverlyWell은 샘플 수령 후 48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
 -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인증받은 의사에게 안내해 원격 진료를 통해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사 결과 데이터는 연방과 주정부의 명령대로 전달 기관에 보내게 됨
- EverlyWell은 현재 3만개의 샘플 채취 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향후 규모를 확장해 매주 25만건의 샘플 채취 및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



초소형 LiDAR 센서 개발 업체 SiLC

- SiLC사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실리콘 포토닉스(Silicon Photonics) 스타트업으로, 기존에 개발된 소형 LiDAR 센서 보다 인식 범위가 길고 해상도와 정확도가 높은 초소형 LiDAR 센서를 개발 중
 - 2020년 3월 Dell이 주도하고 Decent Capital, ITIC Ventures 등의 투자자로부터 1,200만 달러의 시드펀드를 유치
- SiLC사의 4D+ Vision 칩은 905nm 파장을 활용하는 다른 LiDAR 센서와는 달리 1,550nm 파장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이고 주파수 간섭에도 강하며, 초소형 칩으로도 먼 거리에 있는 객체 감지가 가능
- SiLC사는 CES2020에서 자사 4D+ Vision Chip이 190m 떨어진 지붕의 보안 카메라 기둥과 250m 떨어진 가로등 기둥을 감지했으며, 최상의 조건에서는 인식 거리가 약 300m라고 밝힘
- 특히 기존 LiDAR 센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물론이며, 로봇, AR/VR, 생체 스캔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



ISSUE

01

국내외
기술동향

5G 상용화 1년, 주도권 강화 위해 통신·단말 업계 행보 활기

-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확보한 국내 이동사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통신망 제공을 위해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실감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행보 한창

< 국내 이동3사의 5G 커버리지·콘텐츠 개발 계획 >

기업	내용
SKT	• (커버리지) 전국 유동인구 밀집 지역과 교통 요충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5G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5G 클러스터를 올해 240곳으로 확대할 계획 • (콘텐츠) MS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시설 점프 스튜디오를 오픈할 예정
KT	• (커버리지) 전국 6개 공항, KTX, SRT 역사, 경부·호남·서해안·영동 고속도로 전 구간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5G SA 서비스 상반기 개시 예정 • (콘텐츠) 5G 스트리밍 게임을 금년 상반기 내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슈퍼VR에 100여편 초고화질 VR 콘텐츠를 갖출 계획
LGU+	• (커버리지) 해수욕장·리조트·스키장·관광지·국립공원 등에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 • (콘텐츠) 향후 5년 동안 기술개발에 2조 6,000억원을 투자하고, VR·AR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5G 서비스 3.0을 선보일 예정

- (커버리지) 이동3사는 연내 5G 28GHz 대역 및 SA(Stand Alone, 단독모드) 구조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전국 5G 커버리지를 99%로 늘리기 위해 기지국을 확충할 방침
- (콘텐츠) VR·AR·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새로운 5G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5G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5G 서비스 확대에 박차
- 올해 5G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SA구조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앞두고 있어 중저가 5G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LG전자는 준 프리미엄급 성능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중저가 5G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으로 5G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
 - (삼성전자)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플래그십 모델부터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A시리즈까지 5G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 * 일본에서 5G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 NTT도코모를 통해 갤럭시S20 5G 모델을 출시(3.25)했으며 5, 6월경에는 갤럭시S20 플러스 5G를 추가 출시할 예정
 - (LG전자) 5G 시장 확대에 발맞춰 프리미엄부터 보급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5G 모델을 출시하여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
 - * 상대적으로 고가인 V60 씽큐로 유럽과 북미의 5G 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G9 씽큐를 금년 5월 출시해 수익을 확보할 계획. 한편, 일본의 5G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4월 말 V60씽큐 5G를 출시할 계획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20.03.26.)

- 3월 2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
-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왔음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 지속
 -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 LCR(2월말 128.3%, 잠정)이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가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외환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
- 제도 조정방안

- ◇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외환건전성 제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 ①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 ②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③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 한시적 하향조정

1 선물환포지션 한도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 (현황)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40%,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200%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적용
 - *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전월말 자기자본]에 상한을 설정
- (조정방안)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
 - 국내은행은 40→50%로, 외은지점은 200→250%로 한도 확대

<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추이 >

	제도도입 (도입·조정)	제 도입 (‘10.10월)	1차 조정 (‘11.7월)	2차 조정 (‘13.1월)	3차 조정 (‘16.7월)	4차 조정 (‘20.3.19)
국내은행		50.0%	40.0%	30.0%	40.0%	50.0%
외은지점		250.0%	200.0%	150.0%	200.0%	250.0%

- (기대효과)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 확대*로 외화자금 공급 일부 확대 기대
 - * 예: 은행은 외환스왑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 외화자금을 공급하며 외화 공급규모 만큼 선물환포지션 ↑
→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시 스왑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규모 ↑
- (시행계획) 3.19일 既시행(기재부 장관 통첩)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2 외환건전성 부담금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현황)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위기 시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
 - * 부과대상: 전체 외국통화 표시 부채 - 외화예수금 등
- (요율) 은행 10bp,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 5bp
 - *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부과
- (납부시기) 기관별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내 납부 원칙
 -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10개월 내에 50%씩 분할납부도 가능
- (조정방안) 부담금 감면 및 분할납부 확대
 - ('21년 징수 부담금 감면) '20.4~6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추가면제 검토
 -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의 조정은 기재부장관 고시로 가능
 - ('20년 징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2회에 걸쳐 5:5의 비율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비율을 1:9로 조정
 - 분할납부에 따른 2회차 부담금 납부기한도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
 - * 분할납부 비율 및 납부기한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한은) 개정사항
- (기대효과) 금융회사들의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외화차입 여건 일부 개선
- (시행계획) 4월 중 부담금 면제를 위한 고시 시행(기재부)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분할납부 확대 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한은, 4월)

3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 한시적으로 하향】

- (현황) 현재 은행의 외화 LCR* 규제비율은 80%이며, 현재 국내 일반·특수은행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
 - *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바젤Ⅲ 권고사항)
- (조정방안) 외화 LC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
 - * 인하(예시): 3개월간(5.31일까지) 10%p 하향(80→70%)
- (기대효과)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
- (시행계획)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진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참고1) 선물환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 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②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③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제2항)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연혁)

- ① ('10.10) 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 ② ('11. 6, 한도축소) 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은지점 250→200%
- ③ ('12.12, 한도축소)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 국내은행 40→30%, 외은지점 200→150%
- ④ ('16. 7, 한도확대) 美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 '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 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 국내은행 30→40%, 외은지점 150→200%

• (참고2)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요

- (개념) 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 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

*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부과

** 외국통화표시 부채 - 외화예수금 등

*** 부과요율: 10bp(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는 5bp)

- (법적 근거) ①외국환거래법 제11조2 내지 제11조의3, ②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1, ③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근거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① 기획재정부장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연혁)

① ('11. 8) 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 <부과대상 기관> 은행, <부과대상> 계약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부과요율> (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② ('15. 7) 은행非은행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과거 중장기로 차입한 자금의 차환 위험이 대두되더라도 금융회사의 외채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

** <부과대상 기관> 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부과대상>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부과요율> 10bp(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는 5bp)

• (참고3)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개요

□ (개념) 위기상황하에서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액을 감내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규제

$$\frac{\text{고유동성외화자산}}{\text{향후 30일간 외화순현금유출액}} \times 100 \geq 80\% (\text{월평균})$$

○ (규제비율) 월평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비율을 20%p 완화

* '08년 위기시 자체적 외화조달역력 및 국내은행 외화공급 역할, 외환부문 정책금융기능(PF, PEF, 국내기업 외화채권 발행 주관 등)

□ (도입취지) 우리나라는 '15.1월부터 모니터링 비율로 도입하였으며, '17.1월부터 외화 LCR을 외화유동성규제로 시행

□ (적용대상) ①외화부채가 적은 은행과 ②수은, ③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

① (외채규모) 총부채중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난외 포함)가 \$5억 미만인 은행*의 경우 외화 LCR 규제 미적용

* '19년말 기준, 제주광주은행 및 K뱅크, 카카오편행

② (수출입은행) ECA 기관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정책금융기관 특성, 외화조달구조 등을 감안하여 외화 LCR 규제적용 면제

③ (외은지점) 본-지점 유동성 지원 약속서 징구, 본점에 대한 자국의 LCR 규제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외화 LCR 적용 면제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 참석 결과 ('20.03.27.)

- 3월 27일 20시(한국시간) IMF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화상회의로 개최
 -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IMF 총회(Board of Governors)에 IMF 정책방향, 전략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
- 이번 IMFC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4일에 이어 긴급 소집된 두 번째 非정기회의로서
 - 최근 각국의 정책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는 IMF의 역할 제고방안을 중점 논의
- 한편, 통상 IMFC는 1년에 2차례(4월 춘계회의, 10월 연차총회) 개최되고, IMF 24개 이사국의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만 참석하지만,
 - 이번 회의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월 4일 IMFC와 마찬가지로 G20 국가 중 현재 이사국이 아닌 한국* 등 4개국**도 초청
 - * 한국·호주는 IMF 이사직을 2년씩 교대 수임, '18.11월부터 호주가 이사직 수임중
 - **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페인(G20 초청국)
-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IMF도 피해국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언
- 홍남기 부총리는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이강 중국 인민은행총재,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에 이어 네 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정부의 방역·경기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피해국가 지원을 위한 IMF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
 - * 총 7명 선도발언 중 非IMF 이사국은 우리나라가 유일, 그 외 20여개국 추가 발언
- 우선,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처럼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조치없이 비교적 단기간 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 ①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②특별입국절차 등 감염원 유입차단, ③투명한 정보공개, ④자가진단 앱 등 ICT를 활용한 혁신적 방역시스템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 아울러 한국은 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힘
-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추경 포함 32조원 규모 재정·금융지원과 최근 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련한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등 총 1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맞게 전례 없는 대책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코로나19 극복 구미산단 현장 간담회 참석 ('20.04.01.)

- 문재인 대통령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과 함께 구미산단 내 코오롱인더스트리* 공장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극복 현장 간담회에 참석

* 회사 연혁: 한국나이롱 설립('57, 국내 최초 나일론 생산) → 폴리에스터필름 생산('98) → LCD用 광학필름 생산('03) → 폴리이미드(PI) 생산('05) → 코오롱인더스트리 분사('10) → 불화폴리이미드 양산 개시('19)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4.1(수) 10:00~11:00, 구미산단 코오롱인더스트리
- 참석자 : (정부) 문재인 대통령,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
(산업계) 코오롱인더스트리(주), LG이노텍(주), (주)에스엘테크, (주)인당, 아주스틸(주), 인탑스(주), 영진하이텍(주)
(공공기관) 산업단지공단
- 주요 내용 : 코로나19 극복 모범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불화폴리이미드 양산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중 하나인 불화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한 기업으로, 지난 '16년에 불화폴리이미드 개발을 완료하고, '17.12월에는 구미 산단에 생산 공장을 완공
 - * 불화폴리이미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출령 제5항(17)-1C009.b에 해당)
 - ** 고온에서 높은 내구성과 낮은 팽창성을 갖는 소재,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해 유리 대신 사용(기존 폴리이미드에 불화처리를 해 투명도와 전기적 특성 개선)
- 同 공장은 7.3인치 패널 기준으로 연간 약 3,000만대분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19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
- 코오롱의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 및 대규모 양산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대표 성과이며, 해외 수출도 하고 있음
- SKC도 불화폴리이미드 관련 대규모 공장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중
- 정부는 금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기술 개발, 기반구축, 자금·운영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성과가 가속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특히, 올해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통해 '20년에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다부처 협력과제 등을 발굴·추진할 계획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구미산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

- 구미 산단과 입주기업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구·경북 지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
- 먼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연구용 MB필터 설비를 제조용으로 전환하여 마스크 총 200만장 분량의 MB필터를 무상 공급중이며,
 - * 코오롱인더스트리(MB필터 제작) → 산업부(마스크 제작업체 연결) → 마스크 제작업체
- 대구·경북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서울대병원 인재원(경북 문경)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음압치료병실 1개동*을 건설기부
 - * 병상 총 24개 규모 / 약 25억원 소요 / 4.1일부터 본격 운영 예정
- 아울러, 노사가 합심하여 10억원 상당의 창립기념일 선물을 지역사회·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중
- 이 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인탑스(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돌봄 가정,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8,4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 등을 기부하기로 구미시와 협약
- LG이노텍(주)은 구미에 마스크 1.8만장을 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많은 구미산단 기업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제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이 포함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
 - 同 방안은 5.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등 총 29.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 * 신용보증기금 1조 + 기술보증기금 0.9조 + 지역신용보증재단 3.6조
 -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 58.3조원 규모의 선제적인 기업자금 지원을 포함

【간담회 주요내용】

- 금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기업별 코로나19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
 - 참석기업들은 ①주요국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완화, ②중소·중견 금융지원 강화, ③구미산단의 스마트산단 전환, ④지역 기반의 산학협력 강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8
- 성윤모 장관은 참석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와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 복합 위기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극복해야하며,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베트남 경제협력방안 논의 ('20.04.13.)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3일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

* '19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대상국(692억불)이자 4위 누적투자대상국(356억불)

- 이번 화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지난 3일 필수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성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 특히 양국간 긴밀히 구축된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수 기업인의 이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무역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 또한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입국 허용 사례를 바탕으로, 아세안내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

• 이외 양측은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 센터*의 조속한 개소와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센터 : 베트남 현지에서 기술지도, 인력양성, 시험인증지원 등을 통해 한-베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기관

** 경제적수요평가(Economic Needs Test) :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소매점포 개설시, 자국소매업 보호를 위해 2호점부터 심사 의무화

• 한편 양국 장관은 한-베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 설치를 결정하는 화상 서명식을 개최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조되는 국제 비대면 경제의 대표적 시범행정 사례로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장관간 화상 서명을 통해 정부간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될 것

- 이번 서명을 계기로 작업반이 가동되어 EODES가 도입되면, 그간 우리 수출기업이 문서로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가 향후 양국 세관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됨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

- 이를 통해, 증명서 위조 및 통관 지연, 서류 불인정 등 기업애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고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20.04.22.)

- 4월 22일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등이 논의

•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고용노동부)

- ◇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마련
- ◇ ①노사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②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 지원, ③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

1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52만명, +0.9조원)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20만명, 0.27조원)

-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사·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4월말)
- *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②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고시·시행령 개정, +32만명, +0.48조원)

-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 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 (지원수준) 月 50만원×3개월

③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시행령 개정, +0.1조원)

- (대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 *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 *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④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시행령 개정, +0.05조원)

- (대상)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 기간 고용안정 보장
-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6개월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93만명, +1.5조원)

-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 특고·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기 시행중(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천억원)
-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 (지원 내용) 月 50만원×3개월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55만명, +3.6조원)

【공공부문】

①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1조원)

- (분야)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 (IT 분야: 청년 중심)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②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공공일자리(+30만명, +1.5조원)

- (분야)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 (조건)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민간부문(청년)】

①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0.5조원)

- (분야)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 (지원 내용)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②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0.24조원)

- (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 (지원 내용) 月 80만원×6개월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③ 중소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0.32조원)

- (대상) ①특별고용지원업종 및 ②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 (지원 내용) 최대 月 100만원×6개월(주 40시간 기준)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86만명, +4.1조원)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①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49만명, +3.4조원)

* '20.3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24.6% 감안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5만명, +0.13조원)

* 月 50만원×6개월

③ 근로자 생계비 용자 확대(+2만명, +0.1조원)

*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용자(1인당 2천만원 한도)

○ 용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④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고시 및 시행령 개정, 2만명, +0.1조원)

○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 중위소득 80→100% 이하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①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0.13조원)

*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月 50만원×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 저소득층: 7→10만(+3만), ▲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2→5만(+3만),

▲ 청년층: 8→13만(+5만)

②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17만명, 0.3조원)

2.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금융위원회)

◇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 : 40조원+α

① (규모)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 40조원+α

○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조성 : 40조원

-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하여 재원 조달

○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 +α

②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③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ISSUE

02

국내외 경제이슈

-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④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 적용
-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
-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2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①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10조원

-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
 - *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
-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 1차 지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방안 강구

② (기업) 코로나 피해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 +5조원

-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 * (금년 발행량 +5조원) 1.7조원 → 6.7조원, (3년간 발행량) 6.7조원 → 11.7조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자금이용시 고용유지노력*을 유도
 - * 일정기간(예: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③ (시장안정)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 +20조원

-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
 -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역량 제고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시험기관인정 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으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음
- 금번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

-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이 있음
- ◇ 적합성평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적합성평가관리법 주요 내용

-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일반 시험인증기관들도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하였음
- 둘째,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를 그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왔으나, 금번에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
- 셋째,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 넷째,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 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국가기술표준원은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되었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동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5G 상용화 1년, 세계 최초로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1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추진 경과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도말 로드맵(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18.2)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임



< 평창 ICT 체험관 개관식 >



< VR 롤러코스터 >

-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18.6)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18.6)를 개선
-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18.8)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18.8)하여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18.10)을 진행



< VR 배드민턴 체험(아시안게임 5G 체험관) >

- '18.12.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9.4.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

* 5G 데이터와 Wi-Fi 데이터를 상호 변환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연결 가능한 이동형 휴대 단말기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2 5G+ 전략 수립

- 정부는 '19.4.8일 KOREAN 5G Tech-Concert로 이름 붙인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
 -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19.6)하여 운영
 - 아울러,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19.10),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19.10), 5G+ 스펙트럼 플랜('19.12) 등 10여개의 후속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

< 15대 5G+ 전략산업 >

- ◇ (10대 핵심산업)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 ◇ (5대 핵심서비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3 1년간 주요 성과

- Ⅰ (민간 추진성과) 네트워크 장비('26년 세계시장 점유율 20%),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세계시장 점유율 1위, '26년 30%)에서 상용화 첫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가입자기지국)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 시에서 약 10.9만국을 구축



- (단말장비) 우리기업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19.4.3)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삼성전자 43%(1위, 카운터포인트리서치), 35.8%(2위, SA))하고 있으며,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통신장비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동반성장)**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
 -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社は 꾸준한 5G R&D,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Massive MIMO)를 개발하여, 매출액은 '18년 대비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
 - * 5G 핵심 기술로 전파 신호 세기를 강화(빔포밍)하기 위해 다수 안테나를 결합한 설비
 -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社は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 글로벌 업체들에 5G 장비를 공급하여 매출액은 '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원,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원으로 성과를 나타냄
 - * 광케이블과 통신시스템 사이에서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양방향으로 변환
 -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社は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원을 기록



< 다중입출력장치 >



< 광송수신기 >



< VR 콘텐츠 >

- **(해외진출·국제협력)** 통신기술 협력(독일 도이치텔레콤 등), 장비(일본 KDDI, 캐나다 비디오통신(첫 공급), 미국 US셀룰러(첫 공급), 뉴질랜드 스파크(첫 공급))·콘텐츠(중국 차이나텔레콤, 홍콩텔레콤)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 하였고,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19.5), 5G Vertical Summit 2019('19.12) 등을 개최하여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
 - *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 텔레콤(獨), 엘리스(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 ② **(정부 지원사업)**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하여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
- **(차세대 스마트폰)**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 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7~)하고 있음
- **(정보보안)**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19.5)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고려대(스마트공장),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시티), 전남대(에너지)

- (실감콘텐츠)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 과제 제작(28개)을 지원하였으며,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300억원)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

* 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

-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5G 스마트 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
- (자율주행차)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WAVE)·5G 통신 인프라를 구축·개방('19.6)하여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판교에서 자율주행서들을 시범운영

③ 세제혜택·제도개선

- (5G 투자 확대 유인) 정부는 민간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년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과 대상(비수도권 지역)을 확대*

* (세액공제) ①수도권 투자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1.1 시행), ②비수도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추가(2.11 시행)

< '19년 >			< '20년 >		
현행	수도권	비수도권	개선	수도권	비수도권
5G 장비구입비	1%	2+1 ^{최대} %	⇒ 5G 장비구입비	2%	2+1 ^{최대} %
공사비	1%	0%	⇒ 공사비	2%	2+1 ^{최대} %

- (ICT 규제샌드박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여 기지국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기대

< ICT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

- ◇ 원격제어 3회 초과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 기준 및 관련부속서)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 요인*을 파악하여 가동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
- * 차단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원격 복구시 사고 발생 가능, 4개 경우(수동차단, 단락, 과부하, 누전전류 15mA 초과)에 원격 복구를 수행하지 않아야 임시허가 가능

- (전파자원 확충) '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現 2,680MHz폭→5,320MHz폭) 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19.12)하여 추진중

- 정부는 5G⁺ 전략의 '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미국,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 4월 7일 기준 미국은 COVID-19 확진자 40만명, 사망자 약 1만 3천여명에 가까운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 유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자의 증가 추이를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타격은 점점 커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럼프정부는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음
- 3월 27일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상에서는 기준금리를 0~0.25%로 인하하고, 국채 매입, 기업과 개인부채인수 등을 단행하였으며, 한국·호주·멕시코·싱가폴 등 9개국과 6개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나가고 있음
- 아울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달러 규모의 COVID-19 경기부양 패키지를 준비하고 하원 의회에서 통과

< 트럼프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주요 내용 >

지원분야	투입규모(\$)	주요 내용
개인현금지원	2,500억	▶ 1인당 \$1,200, 17세 이하 1인당 \$500 지급 (1인당 세후소득 \$75,000 이하, 맞벌이 부부 \$150,000 이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	▶ 원금상환 및 이자납입 연기(~9.30)
실업급여 증액	2,600억	▶ 4개월간 실업급여 주당 \$600 추가지급
기업대출 프로그램	5,000억	▶ \$250억 여객항공사, \$40억 화물항공사 ▶ \$170억 국가안보사업 ▶ \$4,540억은 일반기업 및 주정부 등에 대출
항공사 및 공항지원	320억	▶ \$250억 여객항공사, \$40억 화물항공사 ▶ \$30억 항공사 협력업체 지원
병원 자금지원	1,170억	▶ \$1,000억 보건기금 조성 ▶ 나머지는 메디케어 환급률 인상에 투입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	▶ 실업급여 신청자격 부여 ▶ 중소기업인 긴급대출신청 자격 부여
주택담보 압류 유예	-	▶ 주택대출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 채권자 담보처분 금지
식료품 지원	4.5억	▶ \$3.5억 Food Bank 자금지원 ▶ \$1억 식료품 배송지원
해외체류 미국인 귀국지원	3.24억	▶ 해외체류 13,500명 귀국지원
국제원조	11.15억	▶ \$3.24억 국제원조, \$2.58억 국제재난지원 ▶ \$8,800만 Peace Corps(국제 자원봉사기관) 지원 ▶ \$3.5억 국제난민지원, \$9,500만 USAID 지원

-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3월 미국 내에서는 전국적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3월 넷째 주 미국의 주당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660만건 기록
- 미국 노동부의 4월 3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미국 일자리수가 70만1,000개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전월대비 3.5%에서 4.4%까지 증가했다고 발표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시작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 <본예산> 2조 1,647억원 → <추경> 2조 6,611억원(+4,964억원)
-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 받게 됨
-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 아직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
 -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
 -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추경 추가 지원금액 >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이상	110,000원+70,000원 <180,000원>	90,000원+70,000원 <160,000원>	90,000원+40,000원 <130,000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00,000원+60,000원 <160,000원>	80,000원+60,000원 <140,000원>	80,000원+35,000원 <115,000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80,000원+50,000원 <130,000원>	60,000원+50,000원 <110,000원>	60,000원+30,000원 <90,000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60,000원+30,000원 <90,000원>	40,000원+30,000원 <70,000원>	40,000원+20,000원 <60,000원>
일용 근로자	월 근로 일수	22일 이상	110,000원+70,000원 <180,000원>	90,000원+70,000원 <160,000원>	90,000원+40,000원 <130,000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00,000원+60,000원 <160,000원>	80,000원+60,000원 <140,000원>	80,000원+35,000원 <115,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90,000원+50,000원 <140,000원>	70,000원+50,000원 <120,000원>	70,000원+30,000원 <100,000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70,000원+30,000원 <100,000원>	50,000원+30,000원 <80,000원>	50,000원+20,000원 <70,000원>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제2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개최
- 김사열 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회의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2명, 위촉위원 16명이 참석
-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②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 ③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고, ④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⑤'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
- ①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3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의 장이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의 장이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
- '20년에는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20년 1,080억원),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제도* 등을 확대 추진하고,
 - * (대구) 대경혁신인재 양성, (대전) 대전형 코업(co-op)뉴리더 양성, (울산) 열린시민대학 등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20년 567억원) 등 '19년 기반조성을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를 본격 추진하는 등 총 39.2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하여 살고 싶은 지역 구현에 힘쓸 계획
- ②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증가분)을 활용한 추가부지 매입(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내용
- ③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은 행복누리관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적으로 건립(경북 의성군 행복포레스트)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세종시 도농상생) 등의 내용
- ④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
- ⑤ '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의 新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년 신기술 개발 및 연계산업 육성을 집중지원하고('20년 국비 642억원, 전년비 26.1%↑)
- 보조금·금융지원·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성과평가와 융복합단지 추진단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는 내용을 담음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기업 시험인증 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 4월 현재 이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인증절차 간소화로 KC 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 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는 236건으로 조사
- * (대상품목) 총 802종(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
-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 중
-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과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주요 사례 >

- ◇ KC 인증(신규) : 공장심사 한시적 유예 조치로, 납품계약 파기 없이 납품 일정에 맞추어 안전인증 취득 후 2천만원 계약 성사
- ◇ KS 인증(기존) : 창호업체는 KS인증 유효기간 만료로 입찰 취소 위기였으나, 금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2억원 계약체결 성사
- ◇ KS 인증(신규) : 심사 자제구역(대구·울산 등) 소재 LED 업체 N社 요청으로, 특별심사반 구성 및 심사실시, KS인증 취득 후 2억원 계약 성사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예정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
-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에 진행된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
-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곤란,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 불가피하게 연구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차관)의 심의까지 거쳐, 코로나 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 (연구비 이월 허용)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으로 허용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연구장비 도입기한 도과,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고자, 적극행정을 통해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비 회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 (장비 도입기한 연장)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과 함께 장비 도입기한(다년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을 연장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 단, 필수 연구장비이고 불가피하게 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 연장을 허용(최대 연장허용 기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기간)
- (간접비 회수 1년 유예) 직접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른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예외적 보류하고,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여부를 재검토
 - *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집행분을 회수(공동관리규정 제19조)

②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되어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하여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
- 특히, 종료·단계평가를 앞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적극 수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
- **(온라인 활용)**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독려
- **(연구실 운영비 정산면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 면제
-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0일에 발표한 참여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기업 R&D 부담 경감 조치에 더하여, 아래 기업 R&D 지원시책도 추가로 추진 중
-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 완화

< 납품기한 도래 여부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 >

기한구분	부담완화 방안	기대효과	비고
미도래	계약/협약기간 연장 사전검토	불가피한 지체상금 발생 방지	계약연장가능시
도래	기성부분(기납부분) 인수 적극 검토 및 지체상금 산정시 지연일수 비가산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연 고려	계약연장불가시
경과	코로나19 사태 이전 기발생한 지체상금 납부유예	現경영악화로 인한 부담완화	-

- 또한, 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동 비용 등을 감면하며,
-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정부 R&D 성과물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코로나19 관련 제품 우선심사*** 등을 통해 판로구축을 지원
- * **(혁신제품 지정제도)** 정부 R&D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 대상,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정하여 수익계약 허용 및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제도
- ** **(1차)** 2.3~3.31 **(2차)** ~4.30 추가 공고
- *** **(기존)** 심사완료(6월), 지정예정공고(7월), 최종선정(8월) → **(우선심사)** 최종선정(6월)
- 아울러, 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과총 등), 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산기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도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인공지능 고급인재의 산실, 인공지능대학원 및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2020년도 신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인공지능 분야 고급인재 양성 거점인 AI 대학원 (고급·전문트랙)과 AI 융합연구 및 인재를 양성할 AI 융합연구센터(융합트랙)에 신규 선정된 대학을 발표
 - AI 대학원은 총 12개 신청 대학(경쟁률 4:1) 중 연세대, 울산과기원,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AI 융합연구센터는 총 15개 신청 대학(경쟁률 3.75:1) 중 부산대, 인하대, 충남대, 한양대에리카 등 4개 대학이 선정
- 먼저, AI 대학원*에 선정된 3개 대학은 AI 석·박사 40명 이상의 교육체계, 국내 최고 수준의 AI 전공 교수진 확충, AI 심화 및 특화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수준 높은 운영계획을 제안
 - * 1년차 10억원, 2년차부터 연간 20억원씩 총 10년간(5+3+2) 최대 190억원을 지원

• '20년도 AI 대학원 선정대학 운영 방향

① 연세대학교

- 탄탄한 SW Foundation과 AI Core를 갖춘 심화·융합·창업형 AI 인재양성
 - AI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 전임교원을 '24년까지 16명('20년, 8명)을 확보하고 세계 Top 컨퍼런스 논문 출판 등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 최고의 AI 인재양성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전사적 지원
 - 대학 차원의 AI 인재양성 집중을 위해 '19년 AI 대학원을 자체 개원하였고, '24년까지 143억원의 민간 대응자금 투자
- AI 혁신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강화
 - YVIP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및 기술사업화 교육을 실시하고, 연세대 기술 지주회사를 통한 유망 AI 스타트업 창업 유도 및 투자 추진

② 울산과학기술원

- AI Core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강화
 - 글로벌 수준의 AI Core 전문가를 '24년까지 16명('20년, 10명) 확보하고 AI+X 교육·연구 강화를 위해 24명 겸임교수 참여
- 국내 동남권 지역의 AI 중심·허브 역할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
 -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지역의 AI 교육·연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력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AI 대학원 중심의 대학내 AI 교육·연구 확산 강화
 - AI 대학원의 모든 커리큘럼을 학내 전체 대학원 학과에 공유·확산



ISSUE

03

국내외
정책이슈

③ 한양대학교

- 세계적 AI 원천기술 확보와 AI 핵심인재양성을 위한 Next AI 추진
 - 한양대 Vision 2030의 중심에 AI 대학원이 역할을 수행하여 한양대의 전통적 실용학풍을 계승하는 AI 핵심인재 집중양성 추진
- 세계적 수준의 AI 특화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한양대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20년 3월 AI 대학원을 신설하고, AI 연구원, AI 솔루션센터, SW/AI 융합교육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 AI 윤리를 강조하여 AI Core 교육·연구와의 조화 강조
 - 한양대 인문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AI 윤리 과목을 전공필수로 신설, 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해하는 AI 인재양성 추구

< AI 대학원 선정대학 운영 방향 >

구분	연세대학교	울산과기원	한양대학교
교원 총원	('20) 8명 → ('24) 18명	('20) 10명 → ('24) 16명	('20) 14명 → ('24) 30명
협력 기관	MIT, 구글, 삼성전자 등	울산시, 현대중공업 등	KT, ETRI, 네이버 등

- 또한, AI 융합연구센터는 AI 학과와 다양한 학과가 협업하여 창의적 융합연구와 교육을 통한 AI 융합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춤
- 올해 선정된 3개 대학은 학교별 강점분야와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간 40명 이상의 AI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

< AI 융합연구센터 선정대학 운영 방향 >

구분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ERICA
참여 교수	('20) 8명 → ('22) 23명	('20) 15명 → ('22) 29명	('20) 16명 → ('22) 21명	('20) 20명 → ('22) 36명
융합 분야	스마트공장	물류, 포털	바이오	의료, 의학

- AI 대학원은 AI 시대를 이끌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5개 대학(KAIST, 고려대, 성균관대, 광주과기원, 포항공대)을 처음으로 선정하여, 대학 AI 교육 혁신을 주도
 - 국내 최초로 AI 핵심이론, 최신기술 특론 등 총 208개 과목의 AI 분야 대학원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였으며,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임교원도 총 50명의 교원으로 시작하여 향후 5년간 총 88명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
 - 올해 AI 대학원 3곳, AI 융합연구센터 4곳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대학 사회 전반으로 AI 교육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AI 대학원 간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촉진하고,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신임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
- 과기정통부는 AI 대학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AI 관련학과 신·증설, 교원의 겸직 허용 등 제도적 정비를 비롯하여 미래를 대비한 전국민 SW/AI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AI 인재확충의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FOCUS

01.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 개요

- 3월 30일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
 - 금번 회의에서는 ①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②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③취약 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

□ 주요 내용

1.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 이상 가구)

1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

- 코로나19로 인명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現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
-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
 -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 ※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1~3차 대책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소규모 사업장 부가가치세 감면,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등도 동 계층에 상당부분 지원

2 (지원규모)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 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①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월126만원) 등
- ②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 ③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등

3 (총 재원 요소) 10.3조원(9.1조원(긴급재난지원금) + 1.2조원(既往지원))

- ① 총 소요 재원 : 총 10.3조원 규모



FOCUS

○ 1.2조원(既지원, 국고 100%) : 저소득층 소비쿠폰(1.0), 긴급복지(0.2)

○ 9.1조원(2차 추경) : 긴급재난지원금(중앙 약 7.1+지방 약 2.0)

② 보조율 : 중앙정부와 지자체 8:2로 지원(다만,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

4 (추경 재원: 약 7.1조원) '20년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총당

□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총당

○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

○ '20년 본예산 세출사업 감액 예시

-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등 삭감

*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 농어촌, SOC 등

5 (향후 일정) 신속하게 2차 추경안 제출

□ 비상경제회의 시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One-point 추경안 제출

□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

○ 정부 제시안은 원칙적으로 충족, 다만 집행방식·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대응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

* 대상가구 소득상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

• (참고: 실제 지원사례) ①4인 가구 100만원 + ② α_1 + ③ α_2 + ④ α_3

○ (예시) 4인가구(부부+아이2) 소득하위 45% : 총 188.8만원 이상 수혜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건보료 감면 8.8 + 돌봄쿠폰 80

* 이외에도 소상공인인 경우,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부가세 감면 12~61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원 등 수혜 가능

①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②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③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④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FOCUS

2.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 부담완화 원칙 >

- ◇ 법개정 없이 現 제도에서 **즉시** 추진 → **3월분부터 적용**
 - * 3월분 既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
 - 저소득층, 30인미만 사업장 중심 최소 **3개월 납부 유예**(신청시)
 -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 추진

<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월 부과분 납부기한(~4.10)			
납부 유예 (신청시)	-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 3개월 납부예외 확대 • 3~5월 부과분 (~4.15까지 신청시) * 3월 부과분 既납부시 5월 환급 * 4~6월분은 ~5.15까지 신청시 유예가능 • 총 소요 6조원 (신청률 50% 가정)	• 30인미만 사업장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既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612만명, 228만개소 • 총 소요 0.8조원	•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既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7조원
감면	• 보험료 하위 20~40% * 하위20% 既감면50% • 3개월 30% 감면 • 3~5월 부과분 * 3월 감면분 고지서 既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488만명(세대) • 총 소요 0.4조원	-	-	•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 6개월 30% 감면 • 3~8월 부과분 * 3월 감면분은 고지서 既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4조원

1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확대

납입자	• 총 2,558만명(가구) (직장 1,728만명 / 지역 830만명)
월보험료	• 평균: (직장) 각각 11.9만원(3.335%) / (지역) 9.8만원
재정수지	•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17.7조원
특징	• 부과식(pay-as-you-go) 운영 → 회계연도별 “수입=지출” 원칙

□ (감면조치)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既감면('20 추경)
-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월소득 223만원

○ (지원효과)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월1,390억원) 감면 혜택

- * 1인당 평균 감면액: 직장가입자 월2.0만원, 지역가입자 월0.6만원

FOCUS

-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건보 감면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납기)	3월분(~4.10)	4월분(~5.10)	5월분(~6.10)
납부액	100%(△0%)	40%(△30%+△30%)	70%(△30%)

2 (국민연금) 납부유예(3개월)

납입자	• 총 1,884만명 (사업장 1,410만명 / 지역 391만명 / 임의 33만명 / 임의계속 50만명)
월보험료	• 평균: (사업장) 각각 12.9만원(4.5%) / (지역) 12.1만원(9%)
재정	•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736.7조원
특징	• 은퇴 후 적립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 (대상) 전체 가입자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 (지원효과) 신청률 50% 가정시 총 6조원 유예
- (적용시기) 3~5월분까지 적용 → 4.15일까지 신청시 3월분 유예
-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 5.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 유예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부액	100% (기납부시)	△100% (환급)	0원	100%	100%	100%
	0원 (미납시)	0원				

- * 6월 납부재개시 추납하지 않는 경우(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납은 선택가능하며 추납분은 60개월까지 분납가능)

※ 보험료 납부유예만 추진

-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에 대한 감면·지원은 연금의 특성상 부적절
- * 두루누리(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외적 지원

3 (고용보험) 납부유예(3개월)

가입자	• 총 1,386만명 / 사업장 236만개소 ('19.12월 기준)
월보험료	• 평균: (사업주) 4.2만원(근로자 1인당) / (근로자) 2.4만원 * 보험요율: (사업주) 1.05~1.65% - 규모별 차등 / (근로자) 0.8%
재정	•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5.9조원
특징	• 가입자(근로자)보다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율이 더 큼

FOCUS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효과)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간 총 7,666억원(월2,555억원) 유예(100% 신청시)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일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일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고보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기일	4.10→7.10	5.10→8.10	6.10→9.10	7.10	8.10	9.10
납부액	0원	0원	0원	200% (3월분 100% +6월분 100%)	200% (4월분 100% +7월분 100%)	200% (5월분 100% +8월분 100%)

*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

※ 보험료 납부유예만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

4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등 대상 ①납부유예(3개월) + ②감면(30%, 6개월)

가입자	• 총 1,873만명 / 사업장 268만개소
월보험료	• 평균: (사업주) 4.0만원(근로자 1인당) * 보험요율: 평균 1.56%(업종별 차등 /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제)
재정	• '19.12월 누적적립금 19.5조원 '19년 지출 6.5조원
특징	• 사업주만 납부(근로자는 보험료 無)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지원효과)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원(월 2,451억원) 유예(100% 신청시)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일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일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지원효과)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월739억원) 감면 혜택
 -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